‘광주 군공항 소음 피해’ 주민 첫 보상 받는다

군소음보상법 적용 5만7000여명에 1인당 평균 36만원 총 180억

2020년 11월 27일부터 13개월분…공항 이전 때까지 매년 지급

광주공항 활주로에서 공군 제1전투비행단 소속 전투기들이 훈련을 위해 이륙하고 있다. ‘군소음보상법’ 시행에 따라 광주시민 5만7000여명이 소송없이 첫 보상금을 받게됐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 군공항 인근 주민 5만7000여명이 ‘군소음보상법’에 의해 처음으로 이뤄진 심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 지급 대상으로 확정됐다. 보상금 지급 총액은 180억원 규모로 1인당 36만원 수준이다. 그동안 주민들은 소송을 통해 군공항 전투기 소음 피해를 구제받았지만, 법 시행으로 피해 보상 절차가 간소화됐다.

29일 광주시 서구·남구·북구·광산구 등에 따르면 이들 4개 자치구는 각각 ‘광주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지급 대상자를 확정했다. 구별 지급 대상자는 서구 2만7516명(보상 총액 92억원), 남구 178명(5000만원), 북구 1명(26만원), 광산구 2만9481명(87억원)으로 총인원은 5만7176명이다.

지급 대상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국방부가 지난해 말 지정·고시한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추정)은 4개 자치구 29개 동에 걸쳐 6만4094명으로 광주시는 파악했지만, 실제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주민은 89.2%에 해당하는 5만7000여명으로 집계됐다.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과 실제 보상금 지급 대상자 수가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일부 주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전입 신고만 돼 있고 실제 거주하지 않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라고 각 자치구는 설명했다.

이번 보상은 군소음보상법이 시행된 지난 2020년 11월 27일부터 지난해까지 13개월분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이다. 보상금은 항공기 소음도에 따라 1인당 1개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000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다. 전입 시기, 실거주일, 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감액된다.

모상호 서구 군소음보상팀장은 “보상금 결정 기준이 법원의 군공항 관련 소음 피해 배상 결정과 같은 내용이어서 연지급액 차이가 없다”며 “개별 소송이 아닌 법에 따른 신청만으로 심사를 거쳐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소송비용 절감은 물론 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고 설명했다.

각 자치구는 이달 말까지 보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결정 내용을 통보하고, 8월 31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통지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 관할 구청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은 일회성이 아니라 군공항 이전으로 인한 소음 발생 종료까지 매년 지급된다. 이번에 보상금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접수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 산정은 ‘보상대상 기간’에 고시된 소음대책지역을 기준으로 하고 경과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는다.

자신의 거주지가 소음대책지역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보려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 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군소음보상법 제정 이전엔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주민들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었다.

광산구 주민 8810명은 지난 2005년 소송을 제기해 2018년 4월 대법원 판결을 통해 306억원을 배상받았다. 이후 서구 주민 4654명도 2018년 9월 광주고등법원의 화해 결정으로 137억6000만원을 배상받는 등 관련 소송이 전국에서 이뤄졌고, 2019년 11월 관련법이 제정됐다. /김형호 기자 khh@

‘5·18 사형수’ 정동년 5·18기념재단 이사장 별세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 수괴 지목…5·18 진상규명운동 헌신

‘5·18 사형수’로 5·18진상규명 등 각종 사회운동에 앞장서 왔던 정동년 5·18기념재단 이사장이 29일 별세했다. 향년 79세.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정 이사장은 심장마비로 쓰러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이날 오전 10시께 숨을 거뒀다.

고인은 오월어머니집 관장을 지낸 이명자씨와 사이에서 아들 둘을 뒀다.

빈소는 광주시 동구 학동 금호장례식장(301호)에 마련됐으며 장례명칭은 ‘5·18 민주국민장’으로 정했다고 5·18재단은 밝혔다. 장례위원회 상임위원장은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지선스님, 최갑순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이사장, 고희범 제주 4·3평화재단 이사장이 맡는다.

장례는 유족 뜻에 따라 3일장으로 치러진다. 발인은 31일 오전 9시, 영결식은 같은 날 오전 10시 광주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진행된다. 이어 고인이 근무했던 5·18기념재단과 모교이자 5·18민중항쟁 발발지인 전남대에서 노제를 지낸 뒤 같은 날 오후 2시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영면에 든다.

1943년 광주에서 태어난 고인은 1964년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을 맡았다.

이듬해 한일 국교 정상화를 ‘굴욕 외교’라고 지적하며 반대 투쟁을 이끌다가 구속, 제적됐다. 1980년 전남대에 복적했으나 5월 17일 비상계엄 확대로 인한 예비검속에 걸려 군에 연행됐다. 육군 상무대 영창으로 끌려간 그는 고문 끝에 이른바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에서 내란 수괴로 지목돼 사형을 선고받아 수감생활을 하다 1982년 말 성탄절 특사로 석방됐다.

이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운동을 비롯한 사회운동에 헌신했다. 광주민중항쟁연합 상임의장, 민주쟁취국민운동본부 공동의장, 5·18민중항쟁30주년기념행사위원회 상임행사위원장, 이철규사인규명대책위 공동의장, 광주 남구청장(1999~2002년) 등을 역임했다. /김형호 기자 khh@

광주시, 여름철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6~8월 상수원 보호구역·환경기초시설 등

광주시는 “집중호우 등을 틈타 공공수역에 오염물질을 무단배출하거나 폐기물을 투기하는 환경오염 사업장에 대해 6월부터 8월말까지 특별단속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하천 등 공공 수역에 근접한 오염물질 취급사업장, 환경기초시설, 상수원 보호구역 등이다.

집중호우가 있는 장마철에는 공공수역 오염물질 불법 배출이 우려되는 지역 내 사업장을, 나머지 기간은 폐기물 불법 행위로 인한 주민피해가 우려되는 지역과 배출사업장을 감시·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오염물질 무단 배출 시 수질오염 등 피해 발생 여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집중호우로 인해 파손, 고장, 훼손된 방지시설 운영 여부 ▲폐기물 불법 투기 ▲환경 관련법 준수 여부 등이다.

코로나19 등을 고려해 가급적 비대면 점검과 관리를 원칙으로 하되, 오염물질 유출 등 시민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김현 광주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장마철 오염물질 무단 배출로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오염 사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환경오염행위 예방 차원의 단속과 수사를 강화하겠다”며 “사업장 스스로 환경관리에 경각심을 갖고 환경오염사고 예방에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경찰청·광주변호사회 ‘변호인 조력권 보장’ 강화키로

경찰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 조력권 보장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전남경찰청은 지난 26일 광주지방변호사회관에서 광주지방변호사회와 ‘경찰 수사과정의 변호인 조력권 보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전남경찰청 최종상 수사부장(경무관)과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진용태 변호사, 제1부회장 장정희 변호사 등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선 2021년 개정된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변화된 경찰수사 환경에서 변호인 조력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진용태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은 “경찰의 권한과 책임이 커진 만큼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종상 전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수사권 개혁 이후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며,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더욱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 서구 무료 산전검사 재개

광주시 서구가 코로나19 상황으로 중단됐던 예비부모 및 임신부를 위한 무료 산전(産前) 검사를 재개한다고 29일 밝혔다.

서구에 거주하는 예비부부·신혼부부·임신부들은 B형 간염 항원·항체, 에이즈, 매독, 혈액형 등 총 9종을 검사받을 수 있다. 예비부모의 경우 풍진항체 검사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검사결과는 온라인 민원서비스 사이트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광주 서구보건소 관계자는 “구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임신·출산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재개된 무료 산전검사를 통해 예비부모 및 임산부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